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2012. 3

이 의 섭

■ 문제의 제기	4
■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현황	5
■ 외국의 사례	18
■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문제점	28
■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개편 방안	36

요 약

- ▶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제는 「건설법」과 「하도급법」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 「건설법」은 하도급 방식·비율,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은 원도급자의 의무·금지·권장 사항, 하도급자의 준수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1984년 제정, 1985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 「하도급법」의 제정 취지는 특정한 하도급 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특정한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 행위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하도급자를 구제하기 위하는 데 있었음.
- ▶ 그러나, 하도급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해야 함.
- ▶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하도급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
- ▶ 따라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하도급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한편, 현행 「건설법」의 하도급 규정은 현행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어음 만기율 유지 의무 및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만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 그러므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건설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

1.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규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에 규정되어 있음.¹⁾
-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서비스업도 적용 대상이고 「건설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 관련 규정은 건설업에만 적용됨.
- 따라서 건설업자는 건설 하도급에 관해서 「하도급법」과 「건설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내용 파악에도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동일한 취지의 규제라 할지라도 두 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의 내용이 상이하여 처분 내용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도 함.
- 「하도급법」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하도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을 동시에 규제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규제하는 경우 건설업에는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경우 제조업에는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나 건설업은 적용하기가 곤란한 제도임.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임.
- 또한, 「하도급법」은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규제(예를 들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두면서도 다른 규제는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모두 적용받는다라는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1) 일본에서 건설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건설업법」임.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하도급법」과 유사한 「하청대금지불지원방지법」(이하 「하청법」)이 있지만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일본 「하청법」 제2조 제4호 참조).

- 더욱이 건설 하도급은 「하도급법」의 모든 규제가 적용되고 「건설법」의 하도급 규제도 적용되므로 건설 하도급은 타 산업 하도급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본고는 「하도급법」과 「건설법」의 2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건설 하도급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현황

(1) 「하도급법」과 「건설법」의 비교

- 「하도급법」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원도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주(outsourcing)의 의미이고, 「건설법」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원도급 계약(prime contract)에 대한 하도급 계약(subcontracting)의 의미임.
-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 산업이 적용 대상이며, 원도급자의 의무·금지·권장 사항, 하도급자의 준수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법」은 건설산업의 하도급 방식·비율,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은 모든 하도급(외주) 거래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업 규모가 차이가 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됨. 「건설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 거래 당사자의 규모의 차이에 관계없이 적용됨.
- 즉, 「하도급법」은 원도급자(「하도급법」 용어로는 원사업자)²⁾가 대기업이고 하도급자(「하도급법」 용어로는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원도급자와 하도

2) 「건설산업기본법」은 원도급자를 수급인,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표현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도급자는 원사업자, 하도급자는 수급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본고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인, 하수급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 하도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급자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건설산업에서는 원도급자의 시공능력평가액(제조업은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하도급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자와의 거래에만 적용 가능함(「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 또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하도급 거래에 관해서는 「건설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하여 「하도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³⁾

<표 1> 우리나라 「하도급법」과 「건설법」의 비교

구 분	「하도급법」	「건설법」
하도급의 정의	원도급을 전제로 하지 않은 외주(outsourcing)	원도급을 전제로 한 하도급(subcontracting)
대상 산업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건설업
적용 대상 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외주 거래(원도급자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
규정 범위	원사업자의 의무·금지·권장 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	하도급 방식·비율,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
적용 순위	우선 적용	「하도급법」 다음에 적용

(2) 「하도급법」의 체계

1) 「하도급법」의 제정 취지

- 현행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⁵⁾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3) 「하도급법」 제34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당시 「공정거래법」 제15조 제4호.

5)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이 외에도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제3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 7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나열하고 있음.

법」의 특별법으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돼 1985년 4월 1일부터 운용해오고 있음.

- 「공정거래법」상 특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둘째,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음.
- 이렇게 특정한 하도급 거래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이러한 것은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음.
- 따라서 특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미리 불공정한 거래로 규정하여 불공정 행위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하도급법」을 제정하여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했음.
- 즉, 특정한 하도급 거래는 자기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정하여 「하도급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 조항(당시 「공정거래법」 제15조 제4호)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하였음.

2) 「하도급법」의 조문별 규정 내용

- 2012년 1월 현재 우리나라 「하도급법」은 본문 51개 조항(제1조에서 제35조)과 부칙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조문별 내용은 <표 2>와 같음.

<표 2> 현행 「하도급법」의 조문별 규정 내용

조 항	규정 내용
제1조	- 법의 목적
제2조	- 정의
제3조 ~ 제20조	-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 금지 사항 및 권장 사항, 발주자의 의무 사항
제21조	-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 ~ 제24조의 6	-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서면 실태조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25조 ~ 제31조	- 벌칙 규정
제32조 ~ 제35조	- 제32조는 고발, 제33조는 과실 상계, 제3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는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 자료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음.

3) 「하도급법」의 목적

- 「하도급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음.

4) 적용 업종 및 대상 거래

- 제2조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 업종은 건설업·제조업 및 서비스업임. 적용 대상 거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와 규모의 차이가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거래이고, 적용 대상 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임.

5)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

- 원도급자의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등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3>과 같음.

<표 3>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

구분	항목	내용
의무 사항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제3조)	1. 원사업자는 계약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보존하여야 함.
	2. 선금금의 지급 의무(제6조)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3. 내국 신용장의 개설(제7조)	3.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하도급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함(수급사업자가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4. 검사 및 검사 결과 통지 의무(제9조)	4.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5.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제15조)	5.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건설 하도급은 해당 사항 없음).
	6. 하도급 대금 일정 기한 내 지급 의무(제13조 제1·2·3항)	6.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7. 현금 결제 비율의 유지 의무(제13조 제4항)	7.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8. 어음 만기일 유지 의무(제13조 제5항)	8.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보다 짧은 만기의 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함.
	9.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의무(제13조의 2)	9. 건설공사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10. 설계 변경 등 하도급 대금의 조정 및 지급 의무(제16조)	10. 원사업자가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았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함.
	11.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16조의 2)	11. 수급사업자가 납품 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함.

6)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등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4>와 같음.

<표 4>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구분	항목	내용
금지 사항	1.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제4조)	1.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비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 금지
	2.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제5조)	2. 특정 물품·장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3. 부당한 발주 취소 및 수령 거부의 금지(제8조)	3. 원사업자는 임의로 발주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 또는 지연 금지
	4. 부당 반품의 금지(제10조)	4.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이를 반품시키는 것 금지
	5. 하도급 대금의 부당 감액 금지(제11조)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 금지
	6. 물품 구매 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의 금지(제12조)	6.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에게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에 앞서 대금을 청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 금지
	7.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제12조의 2)	7.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금지
	8. 부당한 대물 변제의 금지(제17조)	8.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 금지
	9.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제18조)	9.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 금지
	10. 보복 조치의 금지(제19조)1	10. 수급사업자의 신고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11. 탈법 행위의 금지(제20조)	11.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금지

7)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권장 등 원사업자의 권장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5>와 같음.

<표 5>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의 권장 사항

구분	항목	내용
권장 사항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권장(제3조의 2)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권장(제3조의 3)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8)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 「하도급법」 제21조는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시 말해 첫째,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 둘째,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안 되며,
- 셋째,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또한, 건설 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를 의무화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이행 보증서를 의무화하고 있음(<표 6> 참조).

<표 6>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구분	항 목	내 용
의무 사항	1. 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보증서 교부 의무 (제13조의 2)	1.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이행 보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신의 성실 이행 의무(제21조 제1항)	2. 수급사업자는 위탁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3. 법 위반에 대한 비협조 위무(제21조 제2항)	3.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안 됨.
	4. 신고를 한 경우 증거 제출 의무 (제21조 제3항)	4. 신고를 한 경우 증거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9) 발주자 의무 사항

-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므로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의 직접적인 권리 의무의 당사자는 아님.

-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도급 계약과 하도급 계약을 완전히 분리하여 취급하지 않고 특별한 요건이 성립하면 발주자 의무 사항으로 발주자가 반드시 직접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하도급법」 제14조).
- 발주자가 반드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 첫째,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둘째,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셋째, 하도급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도급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넷째,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의 미교부로 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 요청한 경우임.

10) 위반 행위의 신고, 사건의 조사, 하도급 분쟁 조정

- 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는 위반 행위의 신고,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구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22조~법 제24조의 6).

11) 제재 규정

- 「하도급법」의 제재는 행정적 제재와 사법적 제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적 제재는 시정조치, 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고, 사법적 제재로는 벌금 부과가 있음.
- 시정 조치의 유형에는 경고·시정 권고·시정 명령 등이 있고, 시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25조 제3항).

-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 제재금으로 하도급 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음.
- 사법적 제재로서 벌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고 벌금은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 및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음.
- 그리고 부당한 경영 간섭 사항의 금지, 보복 조치 및 탈법 행위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음.
- 단,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1억 5,00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영업 정지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데 기준이 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26조의 제2항).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5점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12) 고발 및 과실 상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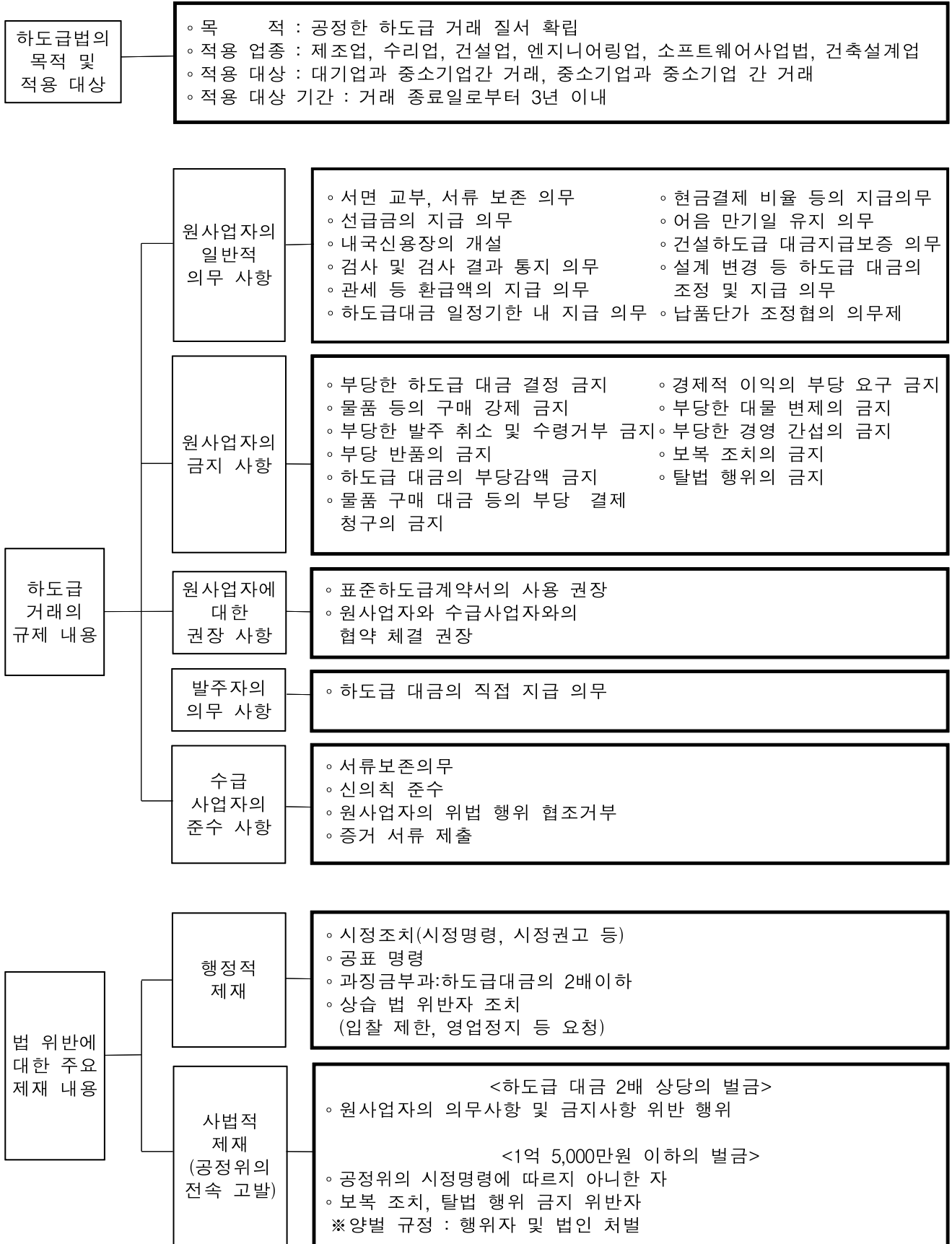
-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 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가 없음.
-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 책임

- 원사업자가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 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정거래법」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함.
 - 「공정거래법」 제56조의 2는 “제56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 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
 - 제57조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임.
- 이상의 「하도급법」 내용을 도식화해보면 <그림 1>과 같음.

<그림 1> 「하도급법」 체계도



(3) 「건설법」에서의 하도급 규정

- 「건설법」에서는 건설 하도급을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원도급 계약과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고 보관할 의무를 제22조에 규정하고,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부터 제38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및 공여의 금지)까지 조항임.
- 내용상으로 구분하면 하도급 방식 및 비율에 대한 규제와 원도급자의 의무,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및 하도급자의 지위에 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7> 참조).

<표 7> 「건설법」 상 건설 하도급 규정

구분	항목	내용
하도급 비율 및 방식 규제	- 수급인의 직접 시공 의무 (제28조의 2)	- 일정 금액 미만 공사는 일정 비율 이상을 수급인이 직접 시공해야 함.
	- 하도급 제한(제29조) · 일괄하도급 금지 · 동종 업종간 하도급 금지 · 재하도급 금지	·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음. ·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자에게,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건설업자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수급인의 의무	1. 계약서 교부 및 보존 의무(제22조)	1. 도급 금액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로 교부하고 보관하여야 함.
	2. 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관리 의무 (제29조의 2)	2.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및 예외 사항에 관해서 하수급인을 관리할 의무
	3. 하도급 계획의 제출(제31조의 2)	3. 공공공사에서 수급인은 하도급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4.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제33조)	4.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정 등에 관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5. 하도급 대금 기한 내 지급 의무 (제34조 제1항)	5.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함.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제34조 제2항)	6.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7.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등(제36조)	7. 설계 변경 등의 경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8. 검사 및 인도(제37조)	8. 수급인은 공사의 준공 등의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고, 합격하는 경우 인수하여야 함.
	9. 불공정 행위의 금지(제38조)	9.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자재 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됨.
발주자의 의무	-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35조)	- 발주자는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제31조)	-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음.
하도급자의 지위	- 하도급자의 지위 규정(제32조)	- 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짐.

3. 외국의 사례

(1) 일본

- 일본은 우리나라 「하도급법」 제정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하청대금지불지연등 방지법」(이하 「하청법」)⁶⁾이 1956년(소화 31년)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 일본 「하청법」에서 건설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1972년 「건설업법」이 개정되어 그 속에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1) 일본 「하청법」 제정의 배경

- 일본에서 하청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것은 1954년 「하청 대금의 부당한 지불 지연 등에 관한 인정 기준」이 정해진 이후임.
- 당시에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기계·기구·무기의 제조 및 수리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하청 대금의 30일 이내에 지불하도록 하고, 부당한 가격 인하 및 반품 등 부당한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음.
- 그러나 이런 기준만으로 종속적 관계에 위치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1956년 「하청법」을 제정하였음.
-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의 지급 지연 등의 행위는 당시의 일본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금지법」) 제2조 제9항 제5호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행위(불공정한 거래 방법 유형 중 하나)⁷⁾에

6) 일본에서는 都給의 의미로 請負, 下都給의 의미로 下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는 「하청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7) 일본 「독점금지법」 제2조 제9항 제5호에서 불공정한 거래 방법이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상대방에게 우월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첫째, 계속해

해당되어 「독점금지법」 제19조⁸⁾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지만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점금지법」의 심판 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문제 해결의 시기를 잃을 우려가 있었음.

· 특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가 「독점금지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둘째, ‘부당하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음.

- 또한, 이러한 심판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하였음.

-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의 위반 사건 처리와는 별도의 간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 「하청법」을 제정하였음.

· 즉, 특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의 위법성을 심판하여 판단하지 않고 특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하청법」에서 불공정 행위로 정해서 규제하게 되었음.

- 다시 말해서, 일본 「하청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및 위반 행위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하여,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한 심판 절차에 비해서 간편한 절차를 규정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의 특별법으로 「하청법」을 제정하였음.⁹⁾

서 거래하는 상대방(새롭게 계속해 거래하려고 하는 상대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해당 거래와 관련되는 상품 또는 역무 이외의 상품 또는 역무를 구입시키는 것. 둘째, 계속해서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금전, 역무 기타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시키는 것. 셋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와 관련되는 상품의 수량을 거절,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와 관련되는 상품을 수령한 후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거래의 대가 지불을 늦추거나 혹은 그 금액을 줄여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 거래를 실시하는 것임.

8) 일본 「독점금지법」 제19조는 “사업자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9)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2002. 3), 「일본 하청법 해설」, p. 1 참조.

2) 일본 하청법의 체계

- 현행(2011년 기준) 일본 「하청법」은 14개 조항(제1조에서 제12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문별 내용은 <표 8>과 같음.

<표 8> 일본 「하청법」의 의무 사항, 금지 사항 및 제재 조치

	내용	제재 조치
의무 사항	1. 주문서의 교부 의무(제3조) 2. 서류 작성·보존 의무(제5조)	- 3만엔 이하의 벌금(제10조)
	3.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일을 정할 의무(제2조의 2) 4. 지연 이자 지급 의무(제4조의2)	- 해당 사항 없음.
금지 사항	1. 수령 거부의 금지(제4조 제1항 제1호)	1. 수령하도록 권고
	2. 하도급 대금의 지급 지연 금지(제4조 제1항 제2호)	2. 지급하도록 권고
	3. 하도급 대금의 감액 금지(제4조 제1항 제3호)	3. 감액 금액을 증액하도록 권고
	4. 반품의 금지(제4조 제1항 제4호)	4. 반품한 것을 인수하도록 권고
	5. 염가 매수의 금지(제4조 제1항 제5호)	5. 하청 대금을 인상하도록 권고
	6. 구입 강제의 금지(제4조 제1항 제6호)	6. 구입시킨 물건을 인수하도록 권고
	7. 보복 조치의 금지(제4조 제1항 제7호)	7. 불이익한 취급을 중지하도록 권고
	8. 유상 지급 원재료 등의 대가의 조기 결제 금지(제4조 제2항 제1호)	8. 하청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권고
	9. 할인 곤란한 어음의 교부 금지(제4조 제2항 제2호)	9. 필요한 조치 권고
	10. 부당한 이익 취득의 금지(제4조 제2항 제3호)	10. 하도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11. 부당한 재요구 금지	11. 필요한 조치 권고
보고 및 검사	1.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거래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2. 중소기업청장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거래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3. 거래 대상 영업을 소관하는 주무 장관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거래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 보고 및 검사를 거절하거나 방해를 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제11조)

① 목적

- 일본 「하청법」의 목적은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및 수급사업자의 이익 보호임.

② 적용 대상

- 일본 「하청법」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적용 대상 하도급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금 규모로 규정하고 있음.
 - 자본금 규모가 1억엔을 초과하는 원사업자와 자본금 규모가 1억엔 이하인 수급사업자(개인 포함)의 하도급 거래(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 자본금 규모가 1억엔 미만 1,000만엔을 초과하는 원사업자와 자본금 규모가 1,000만엔 이하인 수급사업자(개인 포함)의 하도급 거래(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본금 규모를 1,000만엔 기준으로 구분)
- 일본 「하청법」의 적용 범위는 제조업·서비스업은 적용되지만 건설업은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

③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으로는 주문서의 교부 의무(제3조), 서류 작성·보존 의무(제5조), 하도급 대금의 지불 기일을 60일 이내로 정할 의무(제2조의 2), 지연 이자 지불 의무(제4조의 2)를 규정하고 있음.

④ 벌칙 조항 및 권고 조치

- 원도급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일본 「하청법」 제10조).

- 즉, 주문서의 교부 및 서류 작성 및 보존 의무(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경우에만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원도급자가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제4조)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도급자에 대하여 행정 지도 또는 권고를 행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함(일본 「하청법」 제7조).

⑤ 보고 및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소관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 부서는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를 조사하고 보고를 명할 수 있는데(일본 「하청법」 제9조), 이를 위반하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일본 「하청법」 제11조).

⑥ 중소기업청의 청구

-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금지 사항을 원사업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일본 「하청법」 제6조).

⑦ 「독점금지법」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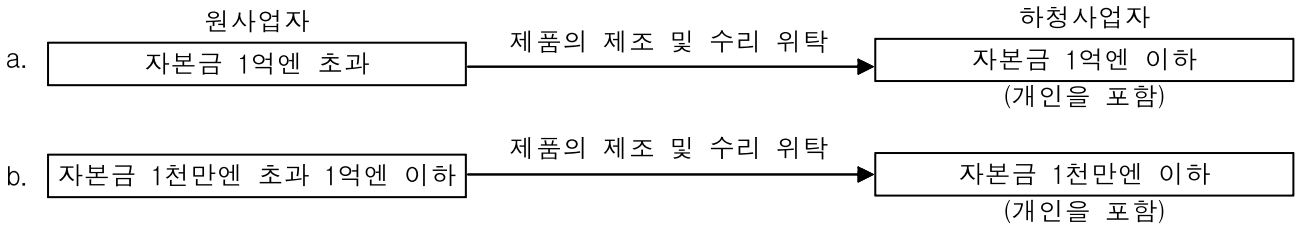
- 일본 「하청법」에 의해서 시정 권고를 하고 원사업자가 이에 응한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상의 원사업자의 그 권고와 관련되는 조항(「독점금지법」 제20조 및 제20조의 6)은 적용하지 않음.
 - 일본 「독점금지법」 제20조는 「독점금지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 계약 조항의 삭제 기타 해당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임.
 - 일본 「독점금지법」 제20조의 6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과징금 산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임.

<그림 2> 일본 「하청법」의 체계도

가. 목적(제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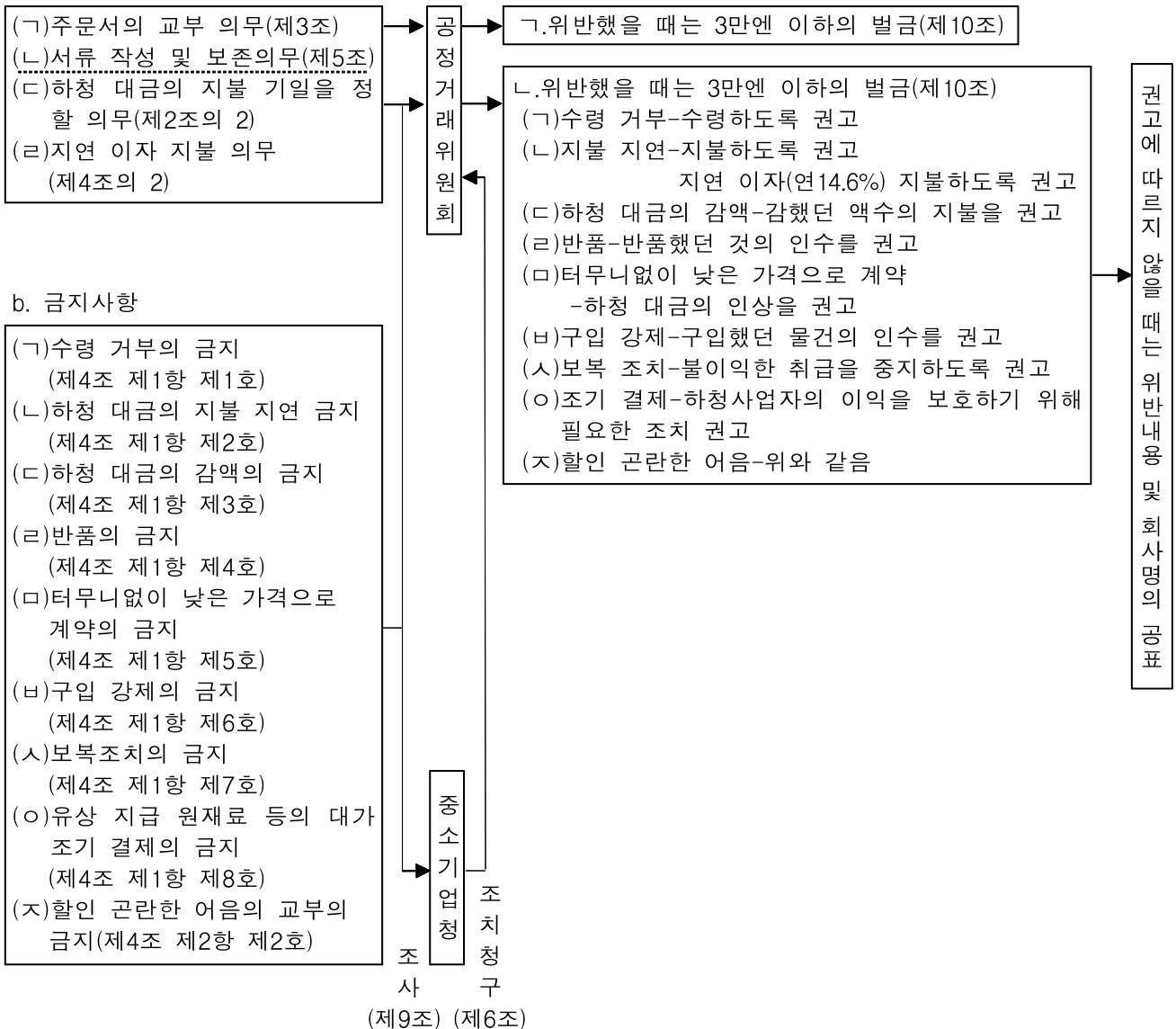
하청 거래의 공정화 및 하청사업자의 이익 보호

나. 원사업자, 하청사업자의 정의(제2조 제1항~제4항)



다. 원사업자의 의무(제2조의 2, 제3조, 제4조의 2, 제5조) 및 금지 행위(제4조 제1항, 제2항)와 조사권(제9조) 및 배제 조치(제7조)

a. 의무



3) 일본 「건설업법」

- 일본 「건설업법」은 제3장 건설공사의 청부 계약에서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1972년 개정시 도입).
- 제22조에서는 일괄하도급 금지, 제23조에서는 발주자의 하도급자 변경 청구, 제24조의 2에서 제24조의 7까지 6개 조항에서 원도급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표 9> 참조).

<표 9> 일본 「건설업법」의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정

구 분	항목	내용
하도급 방식	- 일괄하도급 금지(제22조)	- 도급받은 공사를 타인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계약서 교부 의무	- 도급 계약서 교부(제19조)	- 계약 금액 등 13개 항목을 도급 계약서에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
발주자의 권한	- 하도급자 변경 청구(제23조)	-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도급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원도급자 의무 사항	1. 하도급자의 의견 청취(제24조의 2)	1. 원도급자는 공법 등을 결정할 시에는 하도급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2. 하도급 대금의 지불 의무 (제24조의 3)	2. 원도급자는 공사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함.
	3. 검사 및 인도(제24조의 4)	3.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로부터 완성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완성이 확인된 경우 공사물을 인도받아야 함.
	4. 특정건설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제24조의 5)	4. 특정건설업자인 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을 신청을 받은 이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5. 특정건설업자의 하도급자 지도 (제24조의 6)	5. 특정건설업자인 원도급자는 「노동법」 등의 준수에 대하여 하도급자를 지도해야 함.
	6. 특정건설업자의 시공체제대장 및 시공 체계도 작성 의무(제24조의 7)	6. 특정건설업자인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상호, 해당 하도급업체의 공사 내용 등을 기록한 시공체제대장과 시공 체계도를 현장에 게시해야 함.

4) 일본 「하청법」과 일본 「건설업법」 비교

- 일본 「하청법」에서는 건설업이 적용되지 않음. 건설업에 관한 하도급 규정은 일본 「건설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일본 「하청법」과 일본 「건설업법」은 규제 내용이 상이함. 즉, 일본 「건설업법」은 일괄하도급금지, 발주자의 하도급자 변경 청구 권한과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도 「하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이나 금지 사항과 상이함.
- 일본 「건설업법」에서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하도급법」에서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뿐임.
- 일본 「건설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 중 하도급 대금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 대금의 지불 의무(일본 「건설업법」 제24조의 3 제1항)과 ‘특정건설업자’¹⁰⁾의 하도급 대금 지불 기한(일본 「건설업법」 제24조의 5 제1항), 특정건설업자의 하도급자 지도 의무(일본 「건설업법」 제24조의 6), 특정건설업자의 시공체제대장 및 시공 체계도 작성 의무(일본 「건설업법」 제24조의 7)이 있음.
- 일본 「건설업법」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본 「건설업법」 제24조의 3 제1항).
- 또한, ‘특정건설업자’와 ‘특정건설업자’가 아닌 건설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자가 대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야 함(일본 「건설업법」 제24조의 5 제1항).
- ‘특정건설업자’와 ‘특정건설업자’가 아닌 건설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대금 신청일을 하도급자

10) 일본에서 건설업종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 규모에 따라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3,000만엔, 건축공사의 경우 4,500만엔) 이상의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는 ‘특정건설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특정건설업’ 허가 요건은 ‘일반건설업’ 허가 조건에 추가하여 기술적 기준과 재무적 기준이 강화됨.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의 구분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 규모에만 차이가 있고, 영업 범위 등에는 차이가 없음.

가 하도급 대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50일이 경과한 날로 정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대금 지급 기일로 간주함(일본 「건설업법」 제24조의 5 제2항).

- 건설 공사 하도급에 적용되지 않는 일본 「하청법」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일을 정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일본 「하청법」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본 「하청법」 제4조의 2).

(2) 미국

- 미국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는 「건설업법」이나 「하도급법」과 같은 법률이 없어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미국 연방 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부(42개주와 Washington DC)는 정부 공사에 대해서 발주자의 대금 지급 기한과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고,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일부 주(30개 주)에서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있음.¹¹⁾
-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정부 공공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기성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도급자는 공공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함.

11) America Subcontractors Association, The Contractor's Compass, 4th Quarter 2008.

- 또한,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U. S. Code Title 31, Subtitle III, Chapter 39, Section 3901~3907).

(3) 미국과 일본 제도에서의 시사점

- 미국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 모두 건설 하도급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
- 일본에서 일본 「하청법」은 건설 하도급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건설 공사 하도급에 대해서는 일본 「건설업법」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고 있음.
- 일본 「건설업법」규제 내용도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도 첫째, 하도급 대금(기성금과 준공금)을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규정, 둘째,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완성 통지를 받았을 경우 20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완성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에 공사를 인도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원도급자가 특정건설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자가 대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지불하는 규정, 하도급자 지도 의무 및 시공체제대장 및 시공체제도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 모두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 전부임.
- 미국이나 일본 모두 건설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4.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문제점

(1) 두 법률의 중복 규정

- 제2장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법」과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두 법률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먼저 두 법률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함.
- 구분은 원도급자 의무 사항, 원도급자 금지 사항, 발주자 및 하도급자 의무 사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기로 함.

1) 원도급자 의무에 관한 중복 규정

- 「건설법」과 「하도급법」의 두 개의 법률에 모두 규정되어 있는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은 계약서 교부 및 보관 의무, 하도급 대금(준공금·기성금) 기한 내 지급 의무, 선급금 기한 내 지급 의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일정 기간 내 검사 및 인도 규정임(<표 10> 참조).
- 「건설법」에는 규정되어 있고 「하도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원도급자 의무 규정은 재하도급 금지 관리 의무, 하도급 계획의 제출 의무, 하도급자의 의견 청취 의무 규정뿐임(<표 11> 참조).
- 「하도급법」에는 규정되어 있고 「건설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원도급자 의무 규정은 내국 신용장 개설 의무,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현금 결제 비율 등 유지 의무, 어음 만기일 유지 의무,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의무 규정임(<표 12> 참조).

- 이 중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의무는 건설 하도급과는 관계가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규정이고,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 만기일 유지 의무만이 건설 하도급에 적용되는 규정임.
- 즉, 건설 하도급에 적용될 수 있는 원도급자의 의무 조항은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 만기일 유지 의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표 10> 「건설법」과 「하도급법」의 중복 규정 현황(원도급자 의무 사항)

	「건설법」	「하도급법」
하도급 계약서 교부 및 보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 의무 명시(법 제22조) · 도급 금액 등 18개 항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위반시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99조) · 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 의무 명시(법 제3조) · 계약 시기, 명시사항, 서면 계약 및 교부 의무 부과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위반 사실 공포,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벌금(법 제25조, 25조의 3, 30조)
하도급 대금 기한 내 지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법 제34조 제1항) 〈위반시 제재〉 - 시정 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법 제81조, 제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근거 : 법 제13조)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위반 사실 공포,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벌금(법 제25조, 25조의3, 30조)
선금금 기한 내 지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법 제34조 제4항) 〈위반시 제재〉 - 시정 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법 제81조, 제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해야 함(법 제6조).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위반 사실 공포,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벌금(법 제25조, 25조의3, 30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교부 의무(제34조 제2항) - 예외 인정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신용평가 일정 등급 이상 업체, 4,000만원 이하 공사, 3자간 직불 합의시 〈위반시 제재〉 - 시정 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법 제81조, 제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교부 의무(시행규칙 제28조) 예외 인정 : 신용평가 A등급 업체, 4,000만원 이하 공사, 3자간 직불 합의시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 위반 사실 공포,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벌금(법 제25조, 25조의 3, 30조)

<표 10> 「건설법」과 「하도급법」의 중복 규정 현황(원도급자 의무 사항)(계속)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법 제36조 제1항) ·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 금액을 증액 지급받은 경우 동일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비용 증액 지급, 공사금액 감소시 감액 지급 <p><위반시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법 제81조, 제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법 제16조) · 설계 변경 등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 증액해야 함(감액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감액 가능). <p><위반시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법위반 사실 공포,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벌금(법 제25조, 25조의 3, 30조)
검사 및 인도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법 제37조 제1항). - 수급인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경우 즉시 인수해야 함(제37조 제2항). <p><위반시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명령(법 제8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함(법 제9조 제2항). <p><위반시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법위반 사실 공포,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벌금(제18조 및 20조 위반시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5조, 25조의 3, 30조)

<표 11> 하나의 법에만 규정된 원도급자 의무 사항

구분	건설법	하도급법
재하도급 금지 관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및 예외 사항에 관해서 하수급인을 관리할 의무(법 제29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하도급 계획 제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사에서 수급인은 하도급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제31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하도급자 의견 청취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정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내국 신용장 개설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하도급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함(법 제7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법 제15조).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가 납품 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함(법 제16조의 2).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법 제13조 제4항).
어음 만기일 유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법 제13조 제5항).

2) 원도급자 금지 사항에 관한 중복 규정

-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에 관해서는 「건설법」은 제38조에서 ‘불공정 행위 금지’라는 항목으로 자재 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수급인의 직접 시공 및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반면,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등 11가지 행위를 금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표 12> 참조).

<표 12> 「건설법」과 「하도급법」의 중복 규정 현황(원도급자 금지 사항)

	「건설법」	「하도급법」
하도급자 이익의 부당 침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 행위의 금지(법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 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 금지 · 직접시공 및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금지 〈위반시 제재〉 - 시정 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법 제81조, 제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 물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 금지 등(법 제4, 5, 8, 10, 11, 12조의 2, 18, 20조)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위반 사실 공포,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벌금(제18조 및 20조 위반시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조, 25조의 3, 30조)

3) 발주자 및 하도급자 의무에 관한 중복 규정

① 발주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

- 「건설법」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반드시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반드시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음.
- 「건설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지만 「하도급법」은

발주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있음(<표 13> 참조).

② 발주자 하도급 계약 이행 보증 의무

- 「건설법」은 시행 규칙에서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 이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 13> 「건설법」과 「하도급법」의 중복 규정 현황(발주자 및 하도급자 의무 사항)

	「건설법」	「하도급법」
발주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는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법 제 35조, 규칙 제29조). - 발주자는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위반시 제재></p> <p>○ 없음(「건설법」상 발주자 제재규정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는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법 제 14조, 시행령 제9조). <p style="text-align: center;"><위반시 제재></p> <p>○ 시정조치·법위반 사실 공포,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법 제25조, 25조의 3)</p>
하도급 계약 이행 보증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계약 이행 보증서(하수급인이 발급하여 수급인에게 제출)를 요구할 수 있음(시행 규칙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금액의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함(일부 예외 인정, 법 제13조의 2).

4) 두 법률의 중복 규정에 따른 문제점

-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하도급법」과 「건설업법」의 두 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할 당사자들이 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법의 내용 변화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예를 들어, 건설업체 직원이 건설 하도급의 원도급자 의무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설법」과 「하도급법」 두 개의 법률을 숙지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혼란스러움.

- 동일한 취지의 규제를 두 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 내용은 두 개의 법률에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이 문제됨.
 - 「하도급법」과 「건설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보다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원도급자의 규모가 하도급자의 규모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건설법」이 적용됨.
 - 예를 들어, 원도급자가 준공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법」이 적용되어 시정 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건설법」 제81조 및 82조), 원도급자의 규모가 하도급자보다 큰 경우에는 시정조치·법위반 사실 공포, 하도급 대금 2배의 과징금과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하도급법 제25조, 25조의 3 및 제30조).
- 또한, 이러한 중복 규제의 문제는 공무원 조직의 중복을 가져와 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음.

(2) 「하도급법」에서 건설 하도급 규제의 타당성 문제

1) 「하도급법」의 도입 취지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 유형의 하나인 ‘우월적 지위 남용’(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음.
-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특정한 원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둘째,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음.

-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둘째,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장기간의 심판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 따라서, 특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 유형에 해당되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판단하여 제재를 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을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하였음.

2) 건설 하도급의 우월적 지위 여부

- 하도급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해야 함.
- 쌍방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란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 비교해서 계약 금액 등 계약 조건을 결정할 때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로 해석할 수 있음.
-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요청을 하여도 수급사업자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우월적 지위 여부 판단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원사업자의 시장에 있어서의 지위, 수급사업자의 거래처 변경 가능성, 거래 당사자 사이의 규모의 격차, 시장의 수급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¹²⁾
- 이와 같은 원칙을 준용하여 판단하여 보면, 건설 하도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한

12) 일본 공정거래위원회(평성 22년),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사고」(www.jftc.go.jp).

수급사업자는 여러 개의 원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고, 어느 원사업자도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수급사업자는 수많은 원사업자와 거래를 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항상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것도 아님.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주로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업체는 대기업이 102개사에 불과하고, 중기업이 334개사, 소기업이 1만 608개사임(<표 14> 참조).
- 주로 수급사업자인 전문건설업체도 대기업과 중기업을 합산하면 602개사이고, 소기업이 3만 3,740개사임.

<표 14> 종합건설업체외 전문건설업체의 기업 규모별 분포

(단위 : 개사, %)

구분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대기업	102(0.9)	602(1.8)
중기업	334(3.0)	
소기업	10,608(96.1)	33,740(98.2)
합계	11,044(100)	34,342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경영분석(2009),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통계연보(2009).

- 둘째, 우월적 지위의 여부는 산업 전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비해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 전체에서 판매자가 독과점적 지위가 있으면(공급 독과점) 판매자는 가격 등 계약 조건을 결정할 때 구매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가 있고, 구매자가 독과점적 지위에 있으면(수요 독과점) 구매자는 가격 등 계약 조건을 결정할 때 판매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건설 하도급의 수급사업자는 다수의 원도급자와 거래 관계를 맺어 생산 단가를 낮추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할 수 있고,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건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해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님.
- 즉,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수급사업자도 다수의 원사업자와 하도급

-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
- 건설산업보다는 독과점 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님. 2009년 기준 원도급을 받는 종합건설업체는 1만 1,044개사이고,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는 3만 4,342개사로서 완전 경쟁에 가까운 산업임.
- 쌍방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 여부는 거래 당사자가 갖고 있는 자산 전속성(asset specificity) 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에서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항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님.
- 자산 전속성이란 특정 자산이 특정 생산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정도로서 수급사업자가 자산 전속성이 높으면(예를 들어, 특정 공정에 필수적인 기술에 특허를 갖고 있으면) 하도급자는 수급사업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함.
- 따라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하도급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5.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개편 방안

- 건설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지위가 존재하지 않아 「하도급법」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일본의 「하청법」도 건설 하도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음. 건설 공사 하도급에 대해서는 일본 「건설업법」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의 「하청법」이 건설 하도급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하청법」이 일본 「독점금

지법」의 하도급에 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건설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미국 연방 정부나 주 정부 모두 건설 하도급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규정이 있을 뿐임.
- 건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설 하도급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하도급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건설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
 - 예를 들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자재 공급자나 장비업자에게 자재비나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재 공급자나 장비업자가 공사 현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원도급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현상이 일반적임.
- 건설 하도급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수가 많아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원도급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행 「건설법」은 현행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어음 만기일 유지 의무 및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만이 제외되고 실정임.
-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도 「건설법」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게 하여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건설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제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이의섭(연구위원 · eslee@cerik.re.kr)